

2022년도 제주에너지공사 종합감사 감사결과보고서

2023. 7.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교육감사팀)

목 차

| | |
|---|----|
| I. 감사실시 개요 | 1 |
| II. 감사대상기관 현황 | 1 |
| III. 감사결과 | 4 |
| 1. 복리후생규정 개정 시 승인 절차 미이행(기관경고·권고) | 6 |
| 2. 풍력발전설비 폐기 및 노후화 등에 따른 대책 마련 미흡(통보) ... | 11 |
| 3. ▷▷▷소수력발전소 운영 개선방안 마련 미흡(통보) | 19 |
| 4. CFI에너지미래관 운영 관리 소홀(통보) | 26 |
| 5. 풍력발전기 출력안전용 에너지저장장치 정기검사 후속 조치 부적정(통보) ... | 32 |
| 6.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 업무 처리 소홀(주의) | 37 |
| 7. 4급~6급 직원 정원 통합 운영관리 부적정(통보) | 43 |
| 8. 결산 회계 처리 부적정(시정·주의) | 49 |
| 9. 금전 출납 등 회계 처리 관련 내부통제 장치 미흡(통보) | 55 |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2022년도 자치감사 계획에 따른 종합감사로 제주에너지공사의 풍력 및 태양력 발전사업 추진실태, 에너지 관련 사업 운영실태, 조직 운영,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업무전반에 대한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확인하여 부당사항(문제점)에 대한 시정 요구 개선 등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2. 감사범위 및 감사기간

- 감사범위: 2019. 3. 1. 이후 업무추진상황 전반
- 감사기간: 2022. 12. 14.~12. 20.(5일) * 예비감사: 2022. 12. 8.~12. 13.(4일)

3. 감사단 편성 및 감사분야

- 감 사 단: 교육감사팀장 등 7명(도민감사관 2명 포함)

II

감사대상기관 현황

1. 주요 기능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와 석유, 가스, 석탄 등의 생산, 수송, 분배, 판매,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
- 에너지 연구기술센터 운영, 풍력발전시설 유지·관리
- 집단에너지 사업
- 에너지시설 건설 및 운영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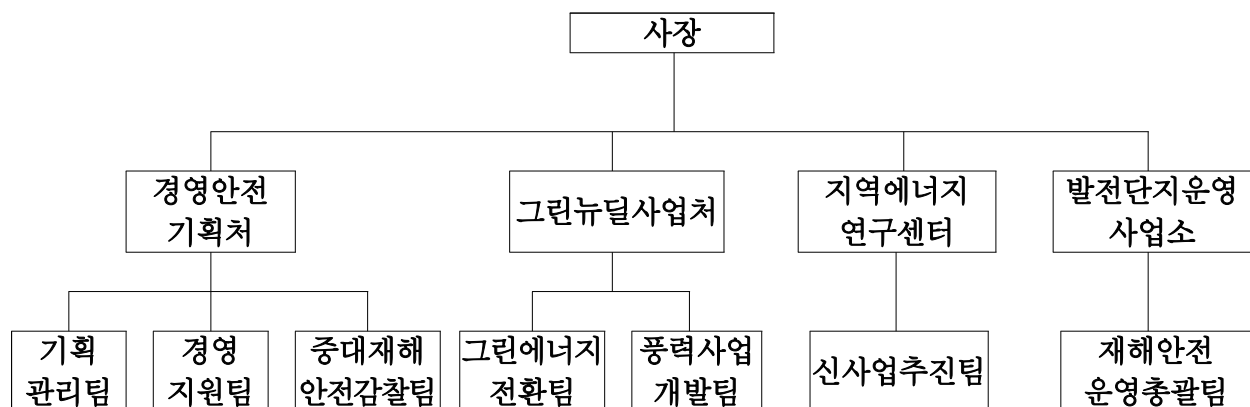
- 에너지시설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및 공유자원 개발사업
- 에너지 관련 교육홍보와 컨설팅 및 학술연구 용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관 협력사업 등

2. 연 혁

- 2012. 7.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등기
- 2015. 8. 동북·북촌 풍력발전단지(30MW) 준공
- 2015. 9. 공공주도 풍력자원개발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 2016. 2. 공공주도 풍력자원 개발사업 1차 후보지 선정(육상 1개, 해상 3개)
- 2019. 3. 수권자본금 확대(1,000억 원 → 5,000억 원)
- 2020. 4. 한동·평대 해상풍력 다른 법인 출자 도의회 동의 의결
- 2021. 3. 보름왓 풍력발전지구 지정 도의회 동의 의결
- 2021. 12. 한동·평대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동의 의결

3. 기구 및 정·현원 현황 (2022. 10. 31. 기준)

- 기구



○ 정·현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 직급별 | 계 | 임원 | 일반직 | | | | | | 공무직 | | |
|----------|----|----|-----|----|----|----|----|----|-----|----|----|
| | |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4급 | 5급 | 6급 |
| 정원 | 60 | 1 | - | 2 | 2 | 49 | | | 6 | | |
| 현원 | 56 | 1 | - | 1 | 3 | 11 | 19 | 17 | - | 3 | 1 |
| 증감 | △4 | - | - | △1 | 1 | △2 | | | △2 | | |

4. 재정 현황

○ 예산

(단위: 천 원)

| 연도별 | 수입 | 지출 ^{주)} |
|----------|------------|------------------|
| 2019년 | 61,758,117 | 68,232,510 |
| 2020년 | 33,929,633 | 40,418,109 |
| 2021년 | 31,179,983 | 37,627,925 |
| 2022년 9월 | 40,811,164 | 47,217,410 |

주: 지출에는 감가상각비(2019년 6,474,393천 원, 2020년 6,488,476천 원, 2021년 6,447,942천 원, 2022년 6,406,246천 원)가 포함되어 있음

○ 재무 상태

(단위: 억 원)

| 연도별 | 재무구조 | | | 부채 중 차입액 | 수익과 비용 | | | 부채비율 (A/B, %) |
|--------------|-------|-------|-------|-------------|--------|-------|----------------|------------------|
| | 자산 | 부채(A) | 자본(B) | | 수익(C) | 비용(D) | 당기순이익 (C-D) | |
| 2019년 | 1,751 | 308 | 1,443 | 265 | 202.9 | 176.5 | 26.4 | 21.3 |
| 2020년 | 1,662 | 229 | 1,433 | 212 | 130.1 | 138 | △7.9 | 16.0 |
| 2021년 | 1,622 | 182 | 1,440 | 159 | 156.3 | 149.7 | 6.6 | 12.6 |
| 2022년 9월(추정) | 1,646 | 153 | 1,493 | 106 | 162.9 | 109.3 | 53.6 | 10.2 |

Ⅲ

감사결과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명)

| 합계 | | | 문책 (인원) | 시정(금액) | | | 주의(인원) | | | | | 개선 권고 | 통보 |
|---------|-------------|-------------|------------|--------|----|----|----------|----------|----------|-----------|----------|----------|----|
| 총 건수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금액 | | 소계 | 회수 | 기타 | 소계 | 기관 경고 | 기관 주의 | 관련자 주의 | 훈계 경고 | | |
| 12 | 4 | - | - | 1 | - | 1 | 4 (4) | 1 | 3 | - (3) | - (1) | 1 | 6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붙임)

처 분 요 구 서

【일련번호: 1】

감 사 위 원 회

기관경고요구 및 권고

제 목 복리후생규정 개정 시 승인 절차 미이행

관계기관(부서) 제주에너지공사(□□□□□)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임·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제주에너지공사 복리후생규정」을 제정하여 위 규정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택 임차 등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1조에 따르면 인사, 보수(연봉제, 복리후생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주에너지공사 사규관리규정」 제12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사규¹⁾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규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사규심의위원회²⁾를 두도록 되어 있고, 내부규칙의 개정 또는 개·폐안은 사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의 결재로 확정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 「제주에너지공사 복리후생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의 결재를 받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기관에서는 2017년 7월 당시 임원에게 매월 600천 원을, 1~6급 직원에게는 500천 원을 각각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던 「제주에너지공사 복리후생규정」에 대하여 직원에게만 매월 최대 1,000천 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택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별표] “「제주에너지공사 복리후생규정」 개정 전후 비교 명세”와 같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을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같은 해 7. 14. 제35차 사규심의위원회를 거쳐 같은 해 7. 18. 사장의 결재를 받았을 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그대로 시행하였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22. 12. 14.~12. 20.) 중 「제주에너지공사 복리후생규정」 개정 이후 위 기관의 주택지원비 지원 및 사택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실제 위 기관에서는 [표]와 같이 2020. 3. 30. ■■■의 거주를 목적으로 제

1) 「제주에너지공사 사규관리규정」 제5조에 따르면 사규는 정관, 규정, 내부규칙임

2) 사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내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주시 연동에 있는 ■■■를 소유주인 ■■■과 임차보증금 250,000천 원에 2021. 3. 29까지 1년 동안 임차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2022년 12월 감사일 현재 까지 임차계약 기간을 연장하였으나 2022. 6. 29. 퇴임으로 공실로 운영하고 있다.³⁾

[표] ■■■의 거주 목적 사택 임대차계약 체결 명세

(단위: m², 천 원)

| 임대차 사유 | 최초 계약기간 | 임대인 | 면적 | 주소 | 임차보증금 | 비고 |
|------------|---|-----|---------|------------|---------|---|
| ■■■ 거주용 | 2020. 3. 30.~ 2021. 3. 29. ^{주)} | ■■■ | 77.0923 | 제주시 연동 ■■■ | 250,000 | 2022. 6. 29. ■■■ 퇴임으로 공실 상태이며, 2022년 12월 감사일 현재 임차 보증금은 260,000천 원임 |

주: 2022. 3. 29.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을 연장한 후, 2023. 3. 29.까지 1년 다시 재연장하면서 임차보증금만 10,000천 원을 상향하였음

자료: 제주에너지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제주에너지공사 복리후생규정」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 없이 개정되어 직원에게 과도한 복리후생이 제공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제주에너지공사 복리후생규정」을 개정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승인을 받고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위 규정 개정 시행 이후 위 건 이외에 사택을 임차하거나 보유한 사택은 없으며, 주택지원비 지원 내역도 없음

조치할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는 2017년 7월 복리후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정한 「제주에너지공사 복리후생규정」을 개정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제주에너지공사에 대하여 엄중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기관경고)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 ① 2017년 7월 복리후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정한 「제주에너지공사 복리후생규정」을 개정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게 **훈계** 조치하고,
-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 없이 2017. 7. 17. 개정한 「제주에너지공사 복리후생규정」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재검토한 후 이사회 의결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권고)

[별표]

「제주에너지공사 복리후생규정」 개정 전후 비교 명세

| 연번 | 구분 | 개정 전 내용(2017. 7. 17. 이전) | 개정 후 내용(2017. 7. 17.) | 개정 사유 |
|----|----------------------|--|--|------------------------|
| 1 | 제15조(주택지원비) 제1항 | 공사는 <u>임원 중</u> 타지방에서 근무를 위하여 제주도(본사소재지)로 이주하여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주택지원비를 보조할 수 있다. <u>다만, 외국인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지원비를 보조할 수 있다.</u> | 공사는 <u>직원 중</u> 타지방에서 근무를 위하여 제주도(본사소재지)로 이주하여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주택지원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임원에 대한 금전적 수당 지급 근거 삭제 |
| 2 | 제15조(주택지원비) 제2항 | <u>임·직원</u> 중에 국내 타 도시로 근무 파견을 명령 받아 그 지역 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주택지원비를 보조한다. | <u>직원</u> 중에 국내 타 도시로 근무 파견을 명령 받아 그 지역 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주택지원비를 보조한다. | |
| 3 | 제15조(주택지원비) 제3항 | 적용대상자인 <u>임·직원</u> 중 다음의 경우 주택지원비 보조에서 제외된다. 2. 국내 타 도시로 근무 파견을 명령 받은 <u>임·직원</u> 중 타도시 내 주거할 수 있는 <u>본인 또는 부모의 주택이 있을 경우</u> , 단 부득이한 상황으로 부모의 주택에 거주하지 못할 경우는 제외될 수 있으나 주택임대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u>한다.</u> | 적용대상자인 <u>직원</u> 중 다음의 경우 주택지원비 보조에서 제외된다. 2. 국내 타 도시로 근무 파견을 명령 받은 <u>직원</u> 중 타도시 내 주거할 수 있는 <u>본인의 주택이 있을 경우</u> | |
| 4 | 제15조(주택지원비) 제4항 | 주택지원비의 보조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휴직 및 정직 기간 중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u>‘별표 1’ 내용</u> - 임원: 600,000원, 1~6급: 500,000원 - <u>지원방법: 월별 지원</u> | 주택지원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u>사장이 정한다.</u> | 우수인력의 유치와 이직 방지 |
| 5 | 제15조의2 (주택 대여 등) 제1항 | 내용 없음 | 공사는 예산 범위 안에서 임·직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사택을 소유 또는 임차할 수 있다. | 사택 운영 기준 마련 |
| | 제15조의2 (주택 대여 등) 제2항 | 내용 없음 | 제1항의 소유 또는 임차한 사택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부지침으로 정한다. | |

자료: 제주에너지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일련번호: 2】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풍력발전설비 폐기 및 노후화 등에 따른 대책 마련 미흡

관계기관(부서) 제주에너지공사(주)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표 1]과 같이 풍력발전설비, 태양광발전설비 등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이중 풍력발전은 97.4%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신·재생에너지 시설 현황

(단위: kW, %)

| 연번 | 구분 | 설비 수 | 발전 규모 | 발전 규모 비중 |
|----|---------|-------------|----------|----------|
| 계 | | | 58,331.7 | 100 |
| 1 | 풍력발전설비 | 5개 위치, 40호기 | 56,830 | 97.4 |
| 2 | 태양광발전설비 | 4개 위치 | 1,501.7 | 2.6 |

자료: 제주에너지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3조 및 「제주에너지공사 정관」 제6조에 따르면 위 기관은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수송, 판매 등의 사업을 수행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제주에너지공사 풍력사업 추진 절차서」 ‘제2장 제1절 3.2 절차도’에 따르면 풍력발전단지의 운영은 20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위 기관에서 작성한 ‘2021년도 결산서’ [3]-5-3-(4) 유형자산에 따르면 발전설비의 내용연수는 20년으로 되어 있다.

한편, 위 기관에서는 2015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풍력발전지구 사업시행 예정자로 지정된 이후 2016년 2월 육상풍력의 경우 1곳을,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3곳을 풍력발전지구 후보지로 각각 선정하였지만, [표 2]와 같이 해상풍력발전지구 2곳은 해저분화구 구역 등으로 인해 후보지 공모 등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 해야 하거나 장기간 계류되는 등 2022년 12월 감사일 현재 총 4개의 사업 중 2 개 사업만 추진되고 있다.

[표 2]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및 풍력발전지구 후보지 선정 후 사업 진행현황

(단위: MW)

| 연번 | 풍력발전지구 | 발전규모 | 현재 진행 단계 | 추진상황 |
|----|--------|------|-------------------------------------|------|
| | 계 | 361 | - | - |
| 1 | 육상풍력 | 21 |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재심의 단계 | 추진 중 |
| 2 | 해상풍력 | 105 | 사업자 공모 및 SPC ^{주)} 설립 준비 단계 | 추진 중 |
| 3 | | 100 | 후보지 공모 등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 필요 | 중지 |
| 4 | | 135 | 제2공항 장애물 제한, 해저분화구 구역 등으로 사업 계류 중 | 중지 |

주: 위 기관, 운영사, 건설사 등이 지분 참여하여 만들 예정의 특수목적법인임

자료: 제주에너지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위 기관의 전체 매출 중 풍력발전설비 매출 비중은 2022년의 경우 97.5%를 차지하는 등 [표 3]과 같이 2019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적게는 85.7%에서 많게는 97.5%까지 차지하고 있다.

[표 3] 제주에너지공사 매출 비중 명세(2019년~2022년 10월)

(단위: 천 원, %)

| 구분 | | 2022년 10월까지 | | 2021년 | | 2020년 | | 2019년 | |
|---------|---------------------|-------------|------|------------|------|------------|------|------------|------|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매출액 합계 | | 16,561,389 | 100 | 15,208,721 | 100 | 12,277,125 | 100 | 18,943,756 | 100 |
| 풍력발전설비 | 소계 | 16,141,784 | 97.5 | 14,032,775 | 92.2 | 10,513,359 | 85.7 | 17,675,983 | 93.3 |
| | 전력판매수익 | 14,914,280 | 90.1 | 11,348,915 | 74.6 | 9,277,995 | 75.6 | 14,910,545 | 78.7 |
| | REC수익 ^{주)} | 1,227,504 | 7.4 | 2,683,860 | 17.6 | 1,235,364 | 10.1 | 2,765,438 | 14.6 |
| 태양광발전설비 | 소계 | 269,109 | 1.7 | 401,101 | 2.6 | 293,248 | 2.4 | 503,652 | 2.6 |
| | 전력판매수익 | 258,372 | 1.6 | 317,811 | 2.1 | 260,903 | 2.1 | 482,748 | 2.5 |
| | REC수익 ^{주)} | 10,737 | 0.1 | 83,290 | 0.5 | 32,345 | 0.3 | 20,904 | 0.1 |
| 기타사업 | 공기관대행사업 수수료수익 등 | 150,496 | 0.8 | 774,845 | 5.2 | 1,470,518 | 11.9 | 764,121 | 4.1 |

주: REC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인정하는 증명서이며, REC 수익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등에게 판매하여 얻는 수익임

자료: 제주에너지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반면, [표 4]와 같이 최근 5개년 동안 가동한 지 10년 이하 풍력발전설비⁴⁾의 가동률⁵⁾은 96.4%에서 98.0% 범위에 있으나 10년을 초과⁶⁾한 풍력발전설비의 가동률은 87.0%에서 91.7% 범위에 있는 등 노후화된 풍력발전설비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4) 가동연수 10년 이하 풍력발전설비: 16기

5) 가동률 = (24시간×365일-고장으로 인하여 가동하지 않은 시간)÷(24시간×365일)

6) 가동연수 10년 초과 풍력발전설비: 24기

[표 4] 최근 5개년 풍력발전설비 가동률 명세

(단위: %)

| 연번 | 연도 | 가동연수 10년 초과 풍력발전설비 | 가동연수 10년 이하 풍력발전설비 |
|----|-------------|--------------------|--------------------|
| 1 | 2018년 | 91.7 | 97.2 |
| 2 | 2019년 | 90.5 | 96.4 |
| 3 | 2020년 | 90.4 | 97.7 |
| 4 | 2021년 | 87.0 | 98.0 |
| 5 | 2022년 10월까지 | 90.7 | 98.0 |

자료: 제주에너지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매출이 4개년 동안 평균 90% 이상 풍력발전설비에서 발생하고 있는 반면, 가동하고 있는 총 40기의 풍력발전설비 중 24기는 가동연수가 내용연수(20년)의 절반을 초과하여 노후화로 인해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고, 신규로 추진 중인 사업의 정상 추진 여부도 불투명하므로 풍력발전설비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장기적인 리파워링⁷⁾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이미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노후화 등으로 폐기한 설비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체 설비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기관에서는 2022년 12월 감사일 현재 풍력발전설비 총 40기를 가동하고 있고, 이중 24기(가동 중지 1기 및 가동 중지 예정 1기 포함)가 내용연수인 20년의 절반 이상이 초과된 상태로 가동되고 있으며, [표 5]와 같이 2014년 이후 노후화 등을 사유로 6기의 풍력발전설비를 폐기하거나 가동을 종료하였다.

7) 노후화된 풍력발전설비를 전력생산 효율향상과 운영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최신 풍력발전설비로 교체하는 사업

[표 5] 2014년 이후 폐기되거나 가동 중지 및 가동 중지 예정인 풍력발전설비 명세

(단위: kW)

| 연번 | 풍력발전설비 | 설비 상태 | 발전 규모 | 폐기·가동 중지 연월 | 사유 |
|----|--------|----------|-------|---------------|-------|
| 계 | | | 5,070 | - | - |
| 1 | - | 폐기 | 750 | 2014. 1. | 노후화 |
| 2 | - | | 660 | 2017. 12. | 노후화 |
| 3 | - | | 660 | 2016. 4. | 노후화 |
| 4 | - | | 750 | 2018. 6. | 노후화 |
| 5 | - | | 750 | 2015. 7. | 화재 발생 |
| 6 | - | 가동 중지 | 750 | 2022. 6. | 노후화 |
| 7 | - | 가동 중지 예정 | 750 | 2023. 1. (예정) | 노후화 |

자료: 제주에너지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22. 12. 14.~12. 20.) 중 위 기관에서 폐기 등으로 가동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을 예정인 풍력발전설비에 대한 대체 설비를 확보하였는지 여부와 장기적인 리파워링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였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폐기 등으로 가동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을 예정인 7기의 풍력발전설비에 대해서 2014년 이후부터 2022년 12월 감사일 현재까지 대체 설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위 기관에서는 〰〰〰 풍력발전단지에 대하여는 [표 6]과 같이 2017. 8. 24. “풍력발전기 리파워링 추진계획 점검·보완 방안”문서를 당시 사장에게 결재를 받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지만, 그 외에 가동연수 10년을 초과한 〰〰, 〰〰〰, 〰〰〰 설비 등에 대한 리파워링 계획은 2022년 12월 감사일 현재까지 수립하지 않고 있다.

[표 6] 䄠䄠䄠䄠풍력발전단지 리파워링 계획 추진 현황

| 연번 | 수립일자 | 계획명 | 내용 | 비고 |
|----|------------------|----------------------------|--|---|
| 1 | 2017. 8. 24. | 풍력발전기 리파워링 추진계획 점검보완 방안 | 1) 1단계 - 사업기간: 2017. 8.~2018. 12. - 사업비: 40억 원~50억 원 - 2~3MW급 발전기 1기 2) 2단계 - 사업기간: 2019. 1. ~2019. 12. - 사업비: 40억 원~60억 원 - 2~3MW급 발전기 1기 3) 3단계 - 사업기간: 2020. 1.~2020. 12. - 사업비: 60억 원~80억 원 - 2~3MW급 발전기 1기 | - 종합계획(1단계부터 3단계까지) |
| 2 | 2017. 10. 13. | 리파워링 제1차 추진계획 | - 사업기간: 2017. 10.~2018. 12. - 사업비: 40~60억 원 - 2~3MW급 풍력발전기 1기 | - 종합계획에 따른 1단계 추진계획 · 2020년 6월 사업부지 인근에 주택 신축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 중단 |
| 3 | 2020. 6. 25. | 리파워링 변경계획 | - 사업기간: 2020. 7.~2022. 12. - 사업비: 90억 원 - 3.3MW 또는 4.4MW 1기 | - 2단계 사업 선행 · 2021년 7월 사업부지 동의 문제로 기존에 수립한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 중단 |
| 4 | 2021. 7. 8. | 리파워링 사업 변경 추진계획 | - 사업기간: 2020. 12.~2023. 12. - 사업비: 93.6억 원 - 1차: 연안기초 국책사업(4.2MW) - 2차: 신규(3.3MW) | ※ 민간업체 개발 터빈 시험 목적으로 추진하는 컨소 시엄 형태 국책사업으로 노후시설 리파워링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자료: 제주에너지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위 기관에서는 䄠䄠䄠䄠풍력발전단지의 경우 [표 6]과 같이 2017. 8. 24. 최초 계획 수립 이후 같은 해 10. 13. 수립한 “리파워링 제1차 추진계획”이 사업부지 인근 민원 발생 사유로 2020년 6월 사업 추진이 중단되자 같은 해 6. 25. “리파워링 변경계획”을 수립 하였고, 또 다시 사업부지 동의 문제 등으로 중단되자 2021. 7. 8. 1차 사업으로 연안 기초 국책사업(4.2MW)을 추진하고, 2차 사업으로 신규사업(3.3MW)을 추진하겠다는 “리파워링 사업 변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 12월 감사일 현재 1차 사업 추진에 따른 풍력발전설비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위 1차 연안기초 국책사업은 [표 7]과 같이 위 기관이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라 △△산업에서 풍력발전설비 판매를 위한 인증시험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2020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위 기관에 참여를 요청하자 위 기관과 △△산업,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컨소시엄⁸⁾을 구성하게 되었고, 2020년 11월 국책사업 과제에 선정되면서 추진하게 되었다.

[표 7] ■■■ 연안기초 국책과제 사업 추진 경위

| 추진경위 | 내용 | 비고 |
|------------------|--|--|
| 2018년 11월 | △△산업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국가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 사용의향서 제출 | 4.2MW급 풍력터빈 개발함에 따른 인증시험을 위한 부지 사용 요청 |
| 2020년 2월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증연구단지 확장 타당성 용역 착수 | 용역결과 개발가능 지역은 2개소(■■■리 혹은 ■■■리), ■■■리가 유치 희망(■■■리의 경우 일부 반대로 부결) |
| 2020년 7월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에너지공사에 주관기관으로 과제 참여 요청 | - |
| 2020년 8월 | ▶▶평가원에서 2020년 하반기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신규 과제 공고 | - |
| 2020년 11월 | 과제선정 및 연안기초 국책과제 협약 체결 | - |
| 2022년 12월 감사일 현재 | 국책과제 사업 추진 중 | 풍력발전단지 공사 진행 중 |

자료: 제주에너지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위 기관에서는 신규 사업인 2차 사업(신규, 3.3MW)에 대해서는 3.3MW 미만 풍력발전기 단종, 계통연계 용량 부족 등을 사유로 2022년 12월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풍력발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워짐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매출 및 수익 확보가 불투명해져 안정적인 기관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

8) 컨소시엄 기관별 역할

- 제주에너지공사: 전체사업 총괄 등 주관기관 및 전기공사 업무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수용성 및 인허가 지원
- △△산업: 실증용 풍력발전기 기초 설계 및 발전기 설치·시공

관계기관 의견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노후 풍력발전기 철거 등에 따른 매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리파워링 2차 사업(3.3MW)의 경우 사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2014년 이후 노후화 등으로 폐기하거나 가동을 종료한 7기(가동 중지 예정 1기 포함)의 풍력발전설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체 설비 확보 대책을, 가동연수와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풍력발전설비에 대한 장기적인 리파워링 계획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소수력발전소 운영 개선방안 마련 미흡

관계기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2011. 11. 23. “▷▷▷ 제2저수지 건설공사 연계 ▷▷▷저수지 소수력발전사업 추진 계획”⁹⁾을 수립하고, 2014년 2월경(정확한 날짜 모름) ▷▷▷소수력발전시설(이하 “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운영·관리해 오다가 2018. 3. 26. 제주에너지공사와

9) 관련

| | |
|------|--|
| 사업목적 | ▷▷▷ 제2저수지 건설사업 추진으로 신설될 도수관에 소수력발전기를 설치,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전기 판매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수익 확충(3억 원/년) |
| 위치 | 제주시 해안동 ▷▷▷ 제2저수지 인근 |
| 사업비 | 1,336백만 원(국비 50%, 지방비 50%) |
| 규모 | 소수력발전시설 287kW×1기(연간발전 예상량: 1,885MWh, 연간 전력판매 수익: 3억 원) |

시설보강 사업 업무대행 협약¹⁰⁾을 체결하여 시설보강 사업을 수행하게 하였고, 2019. 10월경(정확한 날짜 모름) 압력관로 설치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이후 대행 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2022년 12월 감사일 현재까지 발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발전시설은 한라산 Y계곡에서 용출되어 도수관을 통해 ▷▷▷ 제2저수지로 유입되는 용출수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로서 소수력 발전기(1기 287kW, 이하 “발전기”라 한다), 전용 압력관로(1.2km), 수배전설비 및 기타 부속설비(1식)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 8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21. 1. 18. 제주에너지공사와 체결한 「▷▷▷소수력발전소 운영·관리 공기관 업무대행 협약서」 제6조에 따르면 대행기관은 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고, 시설물 등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및 인력 등 필요한 종사자를 확보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발주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업무대행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력 및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협약서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에너지

10)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4. 4. 9. ▷▷▷소수력발전기 시운전 도중 발전기에 누수가 발생하여 가동이 중지되자, 2016년 4월 ‘▷▷▷소수력발전소 전용 압력관로 설치 기본 및 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발전시설 보강 사업을 통해 시설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2018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제주에너지공사와 ▷▷▷소수력발전소 시설보강 사업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대행사업을 시행하게 하였으며, 이후 제주에너지 공사에서는 추가적인 전기·기계설비 공사와 발전소 운영·관리까지 수탁받아 소수력발전 노하우 및 운영기술을 확보하고자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매년 발전소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 ▷▷▷소수력발전소 전용 압력관로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용역사: ▽▽▽, 용역비: 40,240천 원, 용역기간: 2016. 4. 11.~2016. 12. 21.

· 주요내용: 사용수량, 발전가능량, 사업타당성 및 시공성 검토 등

· 용역결과: B/C 분석 결과 타당, 닥타일주철관 D500mm 1.2km 포설(공사비 1,088,000천 원)

공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범위는 발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로 소수력발전설비, 부속설비, 압력관로에 대하여 유지관리하고, 이와 관련한 제반 업무 및 기타 제주특별자치도 지시에 의한 업무 등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토지 및 시설물 등의 임대차 및 처분, 시설물의 대폭적인 개량, 변경, 추가, 폐지 업무 등 시설물의 소유자인 제주특별자치도 고유 업무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협약서 제14조에 따르면 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발전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점검 및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및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발전시설의 소유기관으로서 위 발전시설의 문제점 등이 확인될 경우 개선대책을 제시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에서는 2020년 8월 최초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발전기를 가동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나, 갈수기¹¹⁾에 한라산 Y계곡에서 ▷▷▷ 제2저수지로 유입되는 용수량이 급격히 감소할 때 발전기를 가동하면 ▷▷▷정수장 도수관로에 공기가 유입되어 수도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사유로 2021년 10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에서 제주에너지공사에 발전시설 가동 중지를 계속 요청하고 있으며, 발전시설에 대한 가동 중지 요청¹²⁾을 받을 때마다 가동을 중지해 오고 있다.

이로 인해 발전시설 이용률은 [표 1]과 같이 2020년 80.81%에서 지속적으로

11) 여름철에 가뭄으로 인해 수원의 물이 고갈되는 시기와 겨울철에 적설·결빙 등으로 물이 흐르지 않는 시기

12) 발전시설 사용중지 요청 사유: 갈수기로 유량 부족 등

감소하여 2022년 10월에는 0.07%까지 감소하는 등 2022년 평균 이용률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소수력발전기 가동률 및 이용률 현황(2020년 8월~2022년 12월)

| 구분 | 2020년 | | 2021년 | | | | | 2022년 | | | |
|----------------------|------------|-------------|-----------|-----------|----|------------|-------------|-----------|-----------|------|-------------|
| | 8월 ~10월 | 11월 ~12월 | 1월 ~4월 | 5월 ~7월 | 8월 | 9월 ~10월 | 11월 ~12월 | 1월 ~7월 | 8월 ~9월 | 10월 | 11월 ~12월 |
| 가동률(%) ¹⁾ | 92.18 | 0 | 0 | 80.72 | 0 | 57.50 | 0 | 0 | 35.16 | 0.13 | 0 |
| 이용률(%) ²⁾ | 80.81 | 0 | 0 | 36.23 | 0 | 41.01 | 0 | 0 | 21.21 | 0.07 | 0 |

주: 1. 전력설비가 가동할 수 있는 최대시간 대비 실제 가동시간의 비율
 2. 일정기간 동안 실제발전량과 발전설비가 낼 수 있는 발전량을 비교하여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
 자료: 제주에너지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발전시설 설치에 총 2,464,240천 원¹³⁾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이후 대행사업비(발전시설 유지관리 비용)는 2019년에 140,000천 원이, 2020년부터는 매년 100,000천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반면, 전력판매 수익¹⁴⁾은 [표 2]와 같이 2021년에 41,838천 원을 거두었으나 2022년에 발전시설의 가동 중지 기간이 지속되면서 2021년 대비 45.3%가 감소한 18,988천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소수력발전소 전력판매 수익 및 집행 예산 명세

(단위: kWh, 천 원)

13) 소수력발전기 287kW(1기): 1,336,000천 원(국비 668,000천 원, 지방비 668,000천 원), 전용압력관로 설치 기본 및 실시용역비: 40,240천 원, 전용 압력관로 설치 공사비: 1,088,000천 원

14) 최초의 ▷▷▷저수지 소수력발전사업 추진계획(2011. 11. 23.)에 따르면 연간 발전예상량은 1,885MWh, 연간 전력판매 수익은 3억 원으로 예상하였음

| 구분 | 2020년 | | | 2021년 | | | 2022년 | | |
|----------|---------|--------|-----------|---------|--------|-----------|--------|--------|-----------|
| | 발전량 | 발전수익 | 대행사업비 집행액 | 발전량 | 발전수익 | 대행사업비 집행액 | 발전량 | 발전수익 | 대행사업비 집행액 |
| 5월 | - | - | 99,763 | 70,834 | 6,690 | 76,396 | - | - | 36,880 |
| 6월 | - | - | | 66,464 | 7,637 | | - | - | |
| 7월 | - | - | | 63,592 | 8,106 | | - | - | |
| 8월 | 129,991 | 15,649 | | 3 | - | | 9,683 | 3,289 | |
| 9월 | 142,218 | 14,294 | | 56,109 | 8,386 | | 66,373 | 15,676 | |
| 10월 | 132,782 | 8,723 | | 84,562 | 11,013 | | 83 | 23 | |
| 기타(점검가동) | - | - | | 48 | 6 | | - | - | |
| 계 | 404,991 | 38,666 | | 341,612 | 41,838 | | 76,139 | 18,988 | |

자료: 제주에너지공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위와 같이 2022년 1년 동안 발전기 시설의 잦은 가동 중지로 매출 감소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당초 계획한 목적 달성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폭적인 개량, 변경, 추가, 폐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2022년 12월 감사일 현재까지 별다른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고 있다.

한편,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2022년 3월에 전문가 3명을 포함한 총 5명으로 구성된 ‘▷▷▷소수력발전소 정상화 TF’를 뒤희게 구성¹⁵⁾하였고, 2022년 12월 감사일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TF 회의를 개최하고도 현안 문제에 대한 원인을 추정만 하고 있을 뿐,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15) TF 구성 및 회의참석 현황

- 1차 TF(총 5명 구성): 참석 4명(제주에너지공사 관계자 1명, ◀◀◀◀ 관계자 1명, 외부 전문가 2명)
- 2차 TF(총 7명 구성): 참석 6명(제주에너지공사 관계자 2명, ◀◀◀◀ 관계자 1명, 외부 전문가 3명)
- 3차 TF(총 7명 구성): 참석 5명(제주에너지공사 관계자 2명, ◀◀◀◀ 관계자 1명, 외부 전문가 2명)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많은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발전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못하여 매년 재정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갈수기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가동 중지¹⁶⁾로 발전시설 이용률 및 전력판매 수익이 저조하여 대행기관인 제주 에너지공사로 하여금 발전시설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 결과,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소수력발전소 정상화 TF'를 구성하여 3차례 회의를 진행하였고, 해당 발전시설은 갈수기로 인해 가동을 중지하는 것을 제외하고 2021년 약 한달 간 물 역류현상으로 정지하였으나 이는 차후에 조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23년부터는 감독부서인 ▼▼▼▼▼ 담당자와 팀장급, 실질적 운영에 권한이 있는 ◀◀◀◀◀ 관리자급을 TF 구성원에 포함하여 발전시설의 정상 운영을 위한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6) 2021. 10. 24. 제주특별자치도 ◀◀◀◀◀에서 제주에너지공사에 발전기 가동 중지 요청함

- ◀◀◀◀◀ 입장에서는 도민에게 공급되는 물의 수질과 공급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나 ▷▷▷정수장접합정 수위가 1m 이하로 떨어지면 도수관로에 공기가 유입되어 수도공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공기를 빼는데 한 달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원활한 수도공급을 위해서는 접합정 수위가 적어도 항상 1.5m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나 한라산 Y계곡의 용수 유입량이 적을 때 발전기를 가동하면 발전기 내 압력이 떨어져 압력이 채워질 때까지 발전기에서 용수를 잡아놓기 때문에 정수장접합정의 수위가 급속히 낮아지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면 접합정에서 도수관로에 공기가 유입되어 용수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정수장의 물은 Y계곡에서 흐르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용수와 고여있는 저수지물이 혼합되어서 정수가 되어 도민들에게 공급되는데 유량이 적을 때 발전기를 가동하게 되면 압력 유지를 위해 Y계곡에서 흐르는 용수의 공급이 일시적으로 차단되게 됨
- Y계곡 용수 공급 중지 시 접합정 수위 유지를 위해 저수지 물로 대체하여 공급할 수는 있지만 고여 있는 저수지 물을 더 공급하게 되면 수돗물 수질에 큰 악영향(탁도, 냄새 등)을 미칠 우려가 있음

조치할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는 정상 가동이 어려운 ▷▷▷소수력 발전시설의 확인된 문제점에 대하여 제주에너지공사 및 외부 전문가들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상화 방안 또는 대폭적인 개량, 변경, 추가, 폐지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CFI에너지미래관 운영 관리 소홀

관계기관(부서) 제주에너지공사(주)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체험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교육과 홍보를 통한 CFI¹⁷⁾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표 1]과 같이 2010. 5. 19. CFI에너지 미래관¹⁸⁾을 설치하고, 「CFI에너지미래관 관리운영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17) CFI 제주(Carbon Free Island 제주) 정책은 2030년까지 전 부문에 걸쳐 탄소없는 섬 조성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로 도내 전력수요 100%를 대응하고, 친환경 전기차로 도내 운행차량을 대체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정책임

18) 당초 설립 시 명칭은 신재생에너지홍보관이었으나 2021. 8. 19. 관리운영지침을 개정하여 CFI에너지미래관으로 명칭 변경

[표 1] CFI에너지미래관 설립·운영 현황

(단위: 천 원)

| 개관일 | 소재지 | 면적 | 사업비 | 관람시간 ^{주)} | 주요시설 |
|-----------------|---------|----------------------------------|-----------|---------------------------------|---|
| 2010. 5. 19. | 제주시 구좌읍 | 건축물(지상 2층) 1,719㎡, 부지 25,306㎡ | 7,000,000 | 10:00~17:00 (매주 토요일, 일요일 휴무) | 신재생에너지 전시홍보시설, 교육공간, 4D영상관, 에너지소통공감카페 등 |

주: 2021. 8. 19. 관리운영지침 개정으로 휴무일이 매주 월요일에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로 변경됨

자료: 제주에너지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2. 수입원 발굴 및 방문객 유치 노력 미흡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공사는 항상 기업의 경제성을 증대하도록 운영하게 되어 있고, 「202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2021. 6. 30., 행정안전부) I-3.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은 수입원 확대 발굴, 사업수행 방식 개선 등을 통한 수익 증대로 경영수지 개선을 도모하는 등 경영효율성 제고에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기관에서 2021. 7. 29. 수립한 “CFI미래관 활성화를 위한 유료화 추진 계획(안)”에 따르면 같은 해 9월까지 CFI미래관 관람 유료화 준비를 위한 설비를 구축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유료화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위 기관에서는 같은 해 8. 19. 위 기관 「CFI에너지미래관 관리운영지침」(2013. 9. 12. 제정)을 개정하여 관람료 징수를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¹⁹⁾하였다.

19) 「CFI에너지미래관 관리운영지침」 제5조 ① CFI에너지미래관은 무료관람을 원칙으로 함 단, CFI에너지미래관 운영상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음 ②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관람료 금액결정, 징수방법, 관람료 면제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한편, 위 기관에서 운영 중인 CFI에너지미래관은 최근 5년간 [표 2]와 같이 관람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2년의 경우 11월까지 관람객은 총 11,193명으로 일일 평균 50명 수준에 그치고 있고, 수입은 무료 관람으로 인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반면, 비용은 매년 3억 원 가량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CFI에너지미래관 연도별 방문객 및 수입·비용 발생 현황(2018년~2022년 11월)

(단위: 명, 천 원)

| 구분 | | 2022년 11월까지 | 2021년 ¹⁾ | 2020년 ²⁾ | 2019년 | 2018년 |
|----------|--------------|----------------------|---------------------|---------------------|---------|---------|
| 방문객 | 합계 | 11,193 | 2,591 | 6,130 | 16,720 | 22,151 |
| | 학생(단체) | 4,523 | 893 | 769 | 6,661 | 9,417 |
| | 그 외 방문객 | 6,670 | 1,698 | 5,361 | 10,059 | 12,734 |
| 수입 비용 | 수입 합계 | - | - | - | - | - |
| | 비용 합계 | 193,799 | 279,753 | 588,410 | 231,202 | 268,523 |
| | 인건비 | 77,339 ³⁾ | 124,139 | 88,473 | 91,889 | 128,723 |
| | 시설비(수선유지비 등) | 71,196 | 106,278 | 439,522 | 91,475 | 94,306 |
| | 공공운영비 | 45,264 | 49,336 | 60,415 | 47,838 | 45,494 |

주: 1. 코로나19 확산 및 리모델링에 따른 휴관 실시(2020. 12. 23. ~ 2021. 5. 26.)

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관 실시(2020. 2. 25. ~ 6. 18.), 2020년 CFI에너지미래관 리모델링 예산 400,000천 원 포함(제주특별자치도 예산 300,000천 원, 공사 자체 예산 100,000천 원)

3. CFI에너지미래관 운영인력은 현재 3명임(공무직 2, 기간제 1)

자료: 제주에너지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2021. 7. 29. 수립한 CFI에너지미래관 유료화 계획에 따라 신규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설비를 차질 없이 구축하는 한편, 방문객 유치 확대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기관에서는 2021. 7. 29. “CFI미래관 활성화를 위한 유료화 추진계획(안)”을 수립하여 같은 해 9. 15. 개최된 제95차 이사회에 CFI에너지미래관 관람 유료화 설비 구축예산 20,000천 원이 포함된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였고,

이사회에서 위 구축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CFI에너지미래관 관람 유료화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안)을 마련하여 다음 이사회 안건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는데도 이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2022년 12월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위 기관에서 2022. 2. 24. “2022년 CFI에너지미래관 운영 계획”을 수립하면서 CFI에너지미래관의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신규 콘텐츠 개발과 적절한 유지보수, 교육 및 행사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같은 해 10월까지 기존 에너지 부루마블 전시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가칭 e-모빌리티관으로 조성²⁰⁾하겠다는 내용을 반영하고도 2022년 12월 감사일 현재까지 세부계획 수립 등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CFI에너지미래관 제공 서비스 질의 저하로 유료화 전환이 어렵게 되어 운영 적자와 관람객 감소²¹⁾이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3. 「CFI에너지미래관 관리운영지침」 불합리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시설물²²⁾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20) 150백만 원을 투자하여 e-모빌리티(전기차, 수소차 등)의 역사와 현재 정책추진 현황, 미래상에 대한 전시물을 제작 설치하려는 사업임

21) 방문객 현황: 2016년 33,149명 → 2017년 29,773명(전년 대비 감소율 10.2%) → 2018년 22,151(전년 대비 감소율 25.6%) → 2019년 16,720명(전년 대비 감소율 24.5%) → (2020년~2021년 코로나19 영향으로 비정상 운영) → 2022년 12,000명 예상(2019년 대비 감소율 28.2%)

22)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건축물(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함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장애인이 CFI에너지미래관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기관에서는 2013. 9. 12. CFI에너지미래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을 위한 「CFI에너지미래관 관리운영지침」을 제정하면서 위 지침 제8조 제1항에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CFI에너지미래관 관람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후 2022년 12월 감사일 현재까지 위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고 있다.

그 결과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정신장애인이 CFI에너지미래관 관람 금지 등으로 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2항, 수입원 발굴 및 방문객 유치 노력 미흡”과 관련하여 제95차 이사회에 2021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을 상정하면서 CFI에너지미래관 유료화를 위한 시설비 20,000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사회 의결과정에서 삭감되어 유료화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또한 이사회에서 도비와 국비 예산으로 구축된 시설물인 CFI에너지미래관에 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유료화를 추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관의 제95차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위 기관의 주장과 다르게 이사회에서는 CFI에너지미래관 유료화를 위한 시설비 20,000천 원을 삭감하면서 CFI에너지미래관 유료화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안)을 마련하여 다음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이에 위 기관에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CFI 에너지미래관 유료화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작성하여 다음 이사회 회의 시 보고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면서도 이후 종합적인 계획(안)을 수립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위 기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3항, 「CFI에너지미래관 관리운영지침」 불합리”와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위 관리운영지침 내용 중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람 제한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CFI에너지미래관에 대하여 신규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제공 확대 등 관람객 유치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CFI에너지미래관 관리운영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풍력발전기 출력안전용 에너지저장장치 정기검사 후속 조치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䄠䄠연안풍력발전기의 부하이동 및 출력안정화 검증을 위하여 [표 1]과 같이 2015. 11. 6.부터 “풍력발전기 출력안전용 에너지저장장치(ESS)²³⁾ 시범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2016. 12. 29. 䄠䄠연안풍력발전기 변전소 부지에 전력 변환장치(PCS)²⁴⁾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고, 2017. 1. 31.까지 시범운영 및 실증을 거친 후 2017년 2월부터 운영하였다.

23) Energy Storage System의 약자로 에너지저장장치를 말하며, 태양광·풍력발전 등으로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부족할 때 공급하는 장치임

24) Power Conditioner System의 약자로 전력변환장치를 말하며, 충전지에 저장된 전기에너지를 상용 전압과 주파수를 가진 전력으로 바꿔주거나 그 반대로 상용전압과 주파수를 가진 전력을 직류로 변환해서 충전지를 충전하는 장치임

[표 1] 풍력발전기 출력안전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시범구축 사업 명세

(단위: 천 원)

| 수행기관 | 사업기간 | 사업비 | 사업내용 |
|-------------|-----------------------------|---------|--|
| △△△ 외 2개 업체 | 2015. 11. 6. ~ 2017. 1. 31. | 906,700 | 풍력발전기 출력안전용 에너지저장장치 시범 구축 및 실증 (PCS 1,000KW, ESS 500KWH, 수·변전실) |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위 관서에서는 2014년부터 매년 제주에너지공사와 공기관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제주에너지공사로 하여금 䄠䄠연안국산화풍력발전소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위 시범구축 사업으로 설치한 전력 변환장치와 에너지저장장치(이하 “장치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대행 운영·관리 범위에 포함시켰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해당되는 위 장치 등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보완해서 재검사를 받는 등 적정하게 조치하여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에서는 2020. 8. 31. ◆◆공사²⁵⁾에 위 장치 등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같은 해 9. 18. [표 2]와 같이 ◆◆공사로부터 총 5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되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표 2] 전력변환장치(PCS)와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정기검사 시 지적사항 명세

| 연번 | 구분 | 제목 | 지적내용 |
|----|----------------------|--|---|
| 1 | 전기설비 시정요구 | 전력변환장치 절연불량으로 충·방전 시험 등 운전중 검사 미 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PCS의 ACB^주 차단으로 단독운전 방지시험, 충·방전 시험 등 운전 중 검사 미 실시 - PCS 절연저항(0.035MΩ) 불량으로 ACB 차단 추정됨 PCS본체, ACB, 케이블 등 설비점검 완료 후 재검사 신청(2020.12.18.한) 바람 |
| 2 | 전기설비 검사결과 지적사항 | 배터리실 공조기 고장 | 배터리실 공조기(에어컨)의 고장으로 실내 온도 유지 불가하여 공조기 수리 또는 신규대체 필요 |
| 3 | | 입간판·위험표지판·건물별 설치 설비명 누락 및 건물 내·외부 정리정돈 | 전기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입간판 설치 등으로 전기사고를 예방하고 건물 내·외부에 적채되어 있는 폐자재 및 위험물질 정리정돈 필요 |
| 4 | | PCS 패널 본딩접지 누락 | PCS 패널 및 제어용 패널의 본딩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아 전기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접지가 누락된 부분 개선 필요 |
| 5 | | 배터리실, 전력변화장치실, 전기실 누수 개선 | 해안가와 인접하여 해풍 등으로 인해 출입문 등에 부식 및 침식이 발생으로 누수가 되어 전기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개선 필요 |

주: Air Circuit Breaker의 약자로 기중차단기를 말하며, 전기회로에서 접촉자 간의 개폐 작동이 공기 중에서 이상적으로 행해지는 차단기로 전류의 손실이 없도록 과전류를 예측하여 자동으로 회로를 개방하거나 수동적인 방법으로 회로를 개폐하며, 교류 1,000V이하의 회로에 사용함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위 장치 등을 대행 운영·관리하고 있는 제주에너지공사로 하여금 위 5건의 지적사항 중 전기설비 시정요구 건을 제외한 4건의 전기설비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시정조치 하도록 요구하였고 제주에너지공사에서 2020년 9월에서 같은 해 12월 사이 조치를 완료하여 같은 해 12. 31. ◆◆공사로부터 전기적 이상보호장치(과전류, 과전압, 지락) 설치 등 안전조치가 이행되었다는 확인을 받았으나, 전기설비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25) ◆◆공사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실시 등을 하고 있음

그리고 난 이후 2020. 12. 21. ◆◆공사로부터 정기검사 수검 촉구 안내 문서를 접수받고 나서야 뒤늦게 2021. 1. 4. ◆◆공사에 재검사를 신청하였고, 같은 해 2. 2. [표 3]과 같이 재차 불합격 판정을 받자 그 이후부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2022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그대로 두고 있다.

[표 3] 전력변환장치(PCS)와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정기검사(재검사) 시 지적사항 명세

| 검사대상 | 검사일자 | 판정 | 내용 |
|------------------|--|-----|--|
| 전기저장장치 및 전기설비 | 1차: 2021. 1. 7.~1. 8. 2차: 2021. 2. 2.~2. 3. | 불합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격출력(충전 및 방전)으로 부하운전 상태를 점검한 결과, 전기저장장치설비는 정격부하운전 30분에 미달하여 불량함 정격출력(충전 및 방전)으로 부하운전 상태를 점검한 결과, 이차전지는 정격부하운전 30분에 미달하여 불량함 |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9억여 원을 들여 시범구축 사업으로 설치된 풍력발전기 출력안전용 에너지저장장치가 장기간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시설관리 대행기관인 제주에너지공사와 협의하여 재수검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장 설비에 대해 조속히 점검 및 수리를 진행하는 한편, 실증이 종료된 풍력발전기 출력안전용 에너지저장장치의 계속 운영에 대한 경제성(실익 검증) 및 효용성에 대해 전문가에 의뢰하여 향후 운영방안(설비용량 증설, 폐기처분, 이설 등)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는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풍력발전기 출력안전용 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한 불합격 내용을 치유하여 재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제주에너지공사 등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과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운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자(3명)에게는 각각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6】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 업무 처리 소홀

관계기관(부서) 제주에너지공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위 기관 자체 발전수익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2018년부터 매년 [표]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와 공기관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을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표]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 현황

(단위: 천 원)

| 사업명 | 사업기간 | 사업비 | 재원 | 사업내용 |
|----------------|---------------------------------|------------------|--|---|
|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사업 | 2014년부터 매년 사업 수행 ^{주1)} | 300,000 ~500,000 | 제주에너지공사 자체 발전수익 및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주2)} | 장애인 및 조손수급자 가구에 전기 요금 지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대상) |

주: 1.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제주에너지공사 자체 발전수익(500,000천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였고, 2018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대행사업으로 위탁받고 사업비(300,000천 원) 교부받아 사업을 시행하였음

2.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의 이익배당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음

자료: 제주에너지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4조에 따르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고, 특히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만을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대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대행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하고, 대행사업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행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기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체결한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사업 대행 협약서」²⁶⁾ 제10조에 따르면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대행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를 첨부한 대행사업 정산서를 지방보조사업 정산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행사업을 추진 할 때에는 대행사업의 전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에게 대행사업을 시행하게 한 후에는 객관적인 지출 증빙서류가 첨부된 정산서를 제출받아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무(사업)의 대행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기관이 해당 사무(사업)를 수행하기 적합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대행기관의 해당 사무(사업)에 대한 처리가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행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6)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2018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저탄소정책사업 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위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제주에너지공사의 경우

위 기관에서는 2014. 1. 21. ◇◇◇◇◇, ◇◆◆◆지역본부, ●●●●●회 등 3개 기관(단체)과 “제주에너지공사 취약계층에너지 지원사업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²⁷⁾”을 체결하고, 2022년까지 협약기간을 매년 연장²⁸⁾하면서 위 협약내용에 따라 위 기관에서 마련한 재원을 ◇◇◇◇◇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22. 12. 14.~12. 20.) 중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위 기관의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 기관에서는 [도표]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매년 위 대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대행사업비로 풍력자원공유화기금 3억 원을 교부받은 후, 관련 사무를 직접 시행하지 않고 ◇◇◇◇◇에 대행사업비를 전액 지급하여 사무의 전부를 시행²⁹⁾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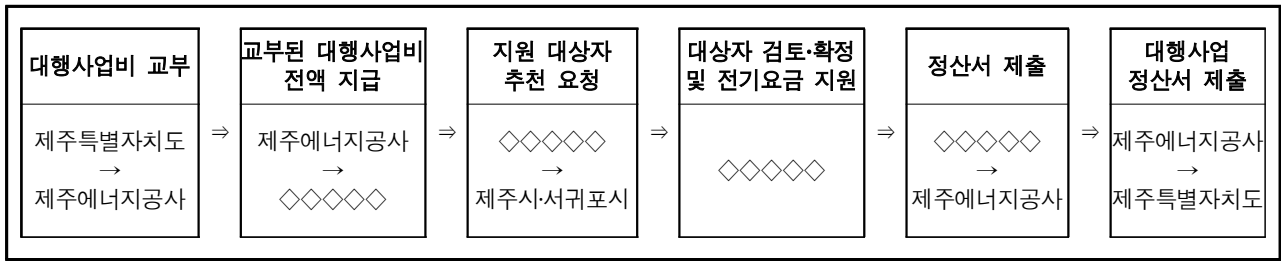
[도표]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 업무 처리 흐름도

27) 업무협약상 기관별 분담 역할

- ① 제주에너지공사: 사업 진행을 위해 마련한 성금을 ◇◇◇◇◇에 기부
- ② ◇◇◇◇◇: 사업 진행 관련 제반 업무를 지원, 사업 결과 제주에너지공사에 제출, 제주에너지공사의 사회공헌사업 적극 홍보
- ③ ◇◆◆◆지역본부: 지원대상가구 전기료 납부에 필요한 업무 적극 지원
- ④ ●●●●●회: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의견 제시 및 홍보 협력

28)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매년 협약을 갱신 체결하였으나 2016년 협약서에 본 협약은 2016. 2. 1.부터 2017. 1. 31.까지로 하며, 제주에너지공사와 ◇◇◇◇◇·◆◆◆◆지역본부·●●●●●회의 이의가 없는 한 매년 자동으로 연장한다는 조항(제4조)을 규정하여 2017년부터 현재까지 자동으로 협약이 연장되고 있음

29)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제출한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 계획”에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에 사업비를 기부하고 ◇◇◇◇◇에서 사업진행에 따른 제반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사업비를 교부하였음



자료: 제주에너지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위 기관에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대행사업 완료 후 ◇◇◇◇◇로부터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하면서 보고서 내용에 총 지원금액, 지원대상 선정 기준(장애인·조손 수급가구), 대상가구별·지역별 지원 내역, 만족도 조사 결과 등만 적시되어 있을 뿐, 사업비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지출결의서, 계좌이체서 등)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데도 보완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정산보고서만 제출받고 있다.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위 관서에서는 “가항”의 내용과 같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을 시행할 대행기관으로 제주에너지공사를 선정하여 매년 대행사업비로 풍력자원공유화기금 3억 원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제주에너지공사에서 대행사업비 전액을 ◇◇◇◇◇에 지급하여 모든 사무를 시행하도록 하고, 사업 완료 후 ◇◇◇◇◇로부터 객관적인 지출증빙서류도 첨부되지 않은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바탕으로 대행사업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행사업비 계좌의 입출금 내역만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도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행기관을 재검토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다.

그 결과 대행사업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게 대행기관이 아닌 제3자가 전부 수행하게 되었고,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이 어렵게 되는 등 대행사업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와 대행사업 수행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계속 추진하게 될 경우 매년 ◇◇◇◇◇와 협약 체결 후 사업을 직접 진행하는 한편, 앞으로 정산보고서 작성 시 객관적인 지출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대행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사업비 집행통장 사본과 지출대상자 세부목록(이름, 지원일자, 지원차수, 지원금액)을 제출받았고, 도내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 지원사업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사업계획, 사업추진현황, 사업결과 보고 등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앞으로 제주에너지공사, ◇◇◇◇◇, 유관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원 대상, 지원 방식 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재구조화할 예정이며, 공기관 대행사업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사업)를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대행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하거나 대행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서에 객관적인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는 앞으로 대행사업을 수행하기로 선정된 대행기관에서 해당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거나 대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정산보고서에 객관적인 지출증빙서가 첨부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7】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4급~6급 직원 정원 통합 운영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에너지공사(□□□□□□)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직제를 개편하고,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효율적으로 조직 및 정원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에너지공사 직제규정」(이하 “직제규정”이라 한다)을 제·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2017. 12. 27. 행정안전부) 제3장 II-1. 합리적인 조직 및 인력배치 및 II-3. 성과중심의 조직·인사관리에 따르면 기관별 건전경영 실현을 위하여 관리직(팀장 또는 과장급 이상 임직원) 비율은 정원의 20%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조직과 인력은 그 업무의 성질과 업무량을 정확히 분석하여

적정규모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이나 상위직 증원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직급의 신설이나 유사 직급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³⁰⁾

그리고 위 기관 직제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시행 내부규칙 제4조에 따르면 공사의 기구는 1사업소·2처·1센터로 하고, 하부조직으로 7팀을 두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사업소장·처장·센터장을 제외한 하부조직의 장은 3급 또는 4급 직원을 보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시행 내부규칙 제6조에 따르면 부서장은 사장 및 상부 조직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 업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어 4급 직원은 관리직의 보직을 받을 수 있는 상위직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소속 직원의 처우개선이나 상위직급 증원을 목적으로 상위직급 정원을 하위직급 정원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상위직급 인원을 과도하게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22. 12. 14.~12. 20.) 중 위 기관의 직급별 정원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 기관에서는 [표 1]과 같이 우수인력 확보 등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정원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2018. 2. 20. 일반직 5급 및 6급 정원을 5급 이하 정원으로 통합하고, 2019. 2. 22.에는 4급 및 5급 이하 정원을 4급 이하 정원으로 통합하여 2022년 12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30) 2021. 3. 23.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이 개정되면서 I-③, IV-①에 관련 내용 신설됨

[표 1] 제주에너지공사 직급별 정원 변동 관리 현황

(단위: 명)

| 변동일 | 합계 | 일반직 | | | | | | 공무직 (계약직) |
|--------------|----|-----|----|----|----|----|----|--------------|
| |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
| 2015. 6. 24. | 41 | 1 | | 2 | 7 | 15 | 11 | 5 |
| 2018. 2. 20. | 50 | 1 | | 2 | 9 | 30 | | 8 |
| 2019. 2. 22. | 56 | － | 2 | 2 | 45 | | | 7 |
| 2021. 1. 22. | 59 | － | 2 | 2 | 48 | | | 7 |
| 2022. 6. 3. | 59 | － | 2 | 2 | 49 | | | 6 |

자료: 제주에너지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관련하여 위 기관의 최초 정원 통합 관리가 이루어진 2018. 2. 20. 이후 일반직 4급 현원의 인원 변동 내역을 점검한 결과, 위 기관에서는 소속 직원의 인센티브 제공 및 사기진작 등을 목적으로 2022년 12월 감사일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승진인사를 실시³¹⁾하여 [표 2]와 같이 일반직 4급 현원이 2018. 2. 20. 이전의 6명보다 5명이 늘어난 11명으로 8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제주에너지공사 일반직 4급 현원 변동 내역

(단위: 명)

| 구분 | 2018. 2. 20. | 2019. 2. 22. | 2021. 1. 22. | 2022. 6. 3. | 2022년 12월 |
|----------|--------------|--------------|--------------|-------------|-----------|
| 정원 | 50 | 56 | 59 | 59 | 59 |
| 현원 | 41 | 48 | 54 | 52 | 54 |
| 4급 이상 현원 | 8 | 11 | 12 | 15 | 15 |
| 1~2급 | 1 | 1 | 1 | 1 | 1 |
| 3급 | 1 | 1 | 2 | 3 | 3 |
| 4급 | 6 | 9 | 9 | 11 | 11 |

자료: 제주에너지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위 기관에서는 2020년 ○○○○협회에서 수행한 “제주에너지공사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연구 용역” 결과,³²⁾ 현장에 필요한 기술지원 기능 강화로 업무

31) 2018년 3월, 2020년 5월, 2021년 7월, 2022년 5월

32) ○○○○협회에서 2020. 4. 29. ~ 10. 30.까지 제작한 제주에너지공사의 경영전략 분석, 전략체계, 중장기 조직 및 인력운영 방안에 대한 용역보고서임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팀 하위 단위에 파트제 또는 지점제 운영이 제시됨에 따라 2021. 2. 8. 위 기관 ㉠㉡㉢㉣㉤ 소속 ㉥㉦㉧㉨ 하위에 ㉩㉪ 1~3 파트를 설치하여 ㉩㉪1 파트장은 ㉥㉦㉧㉨장이 겸임하도록 하고, ㉩㉪2 파트장으로 일반직 4급 직원을, ㉩㉪3 파트장으로는 일반직 5급 직원을 각각 임용한 후 소속 팀원에 대한 연가 승인 및 출장명령, 업무사항 중간 검토³³⁾, 업무수행 차량관리 확인 권한 등 해당 파트의 책임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나서 위 기관에서는 2021. 12. 30. ‘제주에너지공사 현안 해결 및 중장기 경영전략 실행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실시’ 문서를 기안하여 사장의 결재를 받아 ㉥㉦㉧㉨ 하위 단위가 아닌 ㉠㉡㉢㉣㉤ 직속으로 ㉩㉪1, ㉩㉪2 파트를 별도로 설치하는 등 직제규정에 없는 기구를 설치하였다.

이후, 위 기관에서는 2022. 4. 18.에는 ‘현안 대응 유연성 확보 및 전략사업 추진력 강화를 위한 하부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 소속으로 ㉭㉮㉯사업 PM³⁴⁾을 설치하여 직위 명칭을 팀장으로 부여해서 운영하는 등 2022년 12월 감사일 현재 팀 단위 이상 관리직(4급 이상)이 배치되는 직제를 직제규정과 다르게 총 14개(정원 59명 대비 23.72%)로 운영함으로써 관리직 비율이 정원 대비 20%를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관리직에 해당하는 4급 직원의 정원을 하위직 직원 정원과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4급 승진으로 관리직 직원의 증가를 통제할 수 없게 되고, 직제규정 상에 없는 직제와 무보직자 양산 등 조직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33) 업무사항에 대한 최종 결재권은 아님

34) PM(전문관, Project Manager):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일반적인 관리역량을 갖춘 자로서, 프로젝트를 전반적으로 관리(계획, 분석, 조정, 통제, 보고 등)하는 책임자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전문관(PM 또는 파트장)의 경우 전결권한이 제한되어 있고, 구성원에 대한 평가권한도 없어 「근로기준법」상 관리자로 볼 수 없다는 법률적인 자문의견과 2022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관리자 지표에도 관리직 비율(정원의 20% 이내)을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직제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4급 이하 직급별로 정원을 관리하고 향후 조직개편 시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 후 적정 정원을 확보하여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기관에서 법률사무소 ○○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후 2021. 2. 15. 회신받은 자문의견은 단위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처장 및 팀장의 하위 직무로 전문관(PM 또는 파트장)을 두어 업무 전반에 관한 관리 권한이 아닌 개별 프로젝트나 업무가 구성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해당 프로젝트에 관한 일부 관리 권한만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자문의견이고, 위 기관에서는 “3항”의 내용과 같이 운영 파트나 PM을 팀 하위가 아닌 처·사업소 하부의 직속 조직으로 개편한 이후 2022년 12월 감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해당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 법률 자문의뢰 내용은 「근로기준법」상의 관리자 여부에 대한 질의로 이 건 지적사항인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등에 따른 관리자 내용과는 그 취지가 다르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인사조직운영기준」 IV-② 팀장(과장) 이상 간부급 임직원 각주 4)에 따르면 팀장은 정관의 직급과 관계없이 과장 또는 팀장으로 표시된 직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점, 위 기관에서 2022. 4. 18. 이후 팀 하위 단위가 아닌 ■■■■■■■■■■ 및 ○○○○○○ 하위단위로 PM, ●● 1~2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점, 위 기관 홈페이지 부서 안내 및 내부에서 사용되는 직제표에도 PM, ●● 1~2

를 기구표에 포함하여 관리하면서 관리자는 팀장, PM 등으로 안내하고 있는 점, 매월 100천 원의 직책수행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 2022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2021년 실적에 대해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기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하위 직급 정원을 관리직에 보할 수 있는 4급 직급 정원과 통합 관리하는 방법으로 상위직급의 관리자를 무분별하게 양산하거나 직제규정에 반영되지 않은 팀 단위 기구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8】

감 사 위 원 회

시정·주의요구

제 목 결산 회계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에너지공사(□□□□□□)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회계결산시스템³⁵⁾을 구축하여 업무 처리를 하면서 매 회계연도마다 위 시스템 등을 통해 사업실적과 재무제표 등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외부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있다.

2. 중단된 사업 관련 건설중인자산 비용으로 미처리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2021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행정안전부) IV-1-1-가. 적용 회계원칙에 따르면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 및 결산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35) 위 기관에서는 주식회사 ○○에서 개발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여 예산, 회계 등을 처리하고 있음

그리고 「일반기업회계기준」(한국회계기준원 2017. 9. 22. 의결) 제10장 유형자산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르면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건설중인자산 등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중인자산은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등과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이나 처분으로 미래 경제적 효익³⁶⁾이 예상되지 않을 때에는 유형자산을 제거하는 회계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사업의 중단 등으로 더 이상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없는 건설중인자산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기관에서는 2017년부터 추진되었던 䄠䄠䄠䄠풍력발전단지 리파워링 사업이 2021년 7월 중단³⁷⁾되면서 [표 1]과 같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계상된 건설중인자산 89,584천 원은 더 이상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없으므로 2021년도 결산 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은 채 건설중인자산(유형자산)으로 그대로 두었다.

36) 미래에 현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 판매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 장래에 기업의 경영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것 등을 말함

37) ① 2017. 8. 24. 리파워링 추진계획 수립(종합계획), ② 2017. 10. 13. 종합계획에 따른 1단계 추진 계획 수립, ③ 2020년 6월 사업부지 인근에 주택 신축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여 1단계 사업 중단, ④ 2020. 6. 25. 종합계획에 따른 2단계 사업 선행, ⑤ 2021년 7월 사업 부지 동의 문제로 기존에 수립한 1단계와 2단계 사업이 모두 중단됨

[표 1] 〰〰〰〰〰〰발전단지 리파워링 사업 관련 건설중인자산 계상 명세

(단위: 천 원)

| 연번 | 회계처리 일자 | 건설중인자산 내용 | 금액 |
|----|---------------|--------------------------------------|--------|
| 계 | | | 89,584 |
| 1 | 2018. 6. 15. | 〰〰〰〰〰〰발전단지 리파워링을 위한 경관심의 대행 용역 완료 대금 | 17,909 |
| 2 | 2018. 6. 29. | 〰〰〰〰 리파워링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선금금 | 43,991 |
| 3 | 2018. 8. 6. | 〰〰〰〰 리파워링 사업부지 경계복원측량 비용 | 1,211 |
| 4 | 2019. 12. 31. | 〰〰〰〰 리파워링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대금 | 18,870 |
| 5 | 2020. 6. 30. | 〰〰〰〰발전단지 리파워링 1단계 사업 농지전용부담금 | 7,603 |

자료: 제주에너지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2021년도 결산 시 당기순이익 89,584천 원이 과대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임차보증금을 유동자산으로 미분류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제주에너지공사 회계규정」 제100조 및 제105조에 따르면 자산은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고, 보고기간 종료일³⁸⁾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임차보증금의 경우 보고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비유동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38) 회계기간 마감일을 뜻하며 위 기관의 경우 매년 12월 31일임

위 기관에서는 제주시 청사로에 위치한 제주○○○ 건물 1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2020. 12. 29. 제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납부한 임차보증금 30,000천 원의 경우 보고기간 종료일인 2021. 12. 31.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이므로 유동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비유동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등 [표 2]와 같이 3건 계 310,000천 원을 2021년도 결산 시에 유동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지 아니하고 비유동자산으로 처리하였다.

[표 2] 2021년도 결산 시 임차보증금을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지 않은 명세

(단위: 천 원)

| 연번 | 내용 | 계약기간 ^{주)} | 계약상대자 | 금액 |
|----|--------------|---------------------------|-------|---------|
| 합계 | | | | 310,000 |
| 1 | 사무실 1층 임차보증금 | 2021. 1. 1.~2021. 12. 31. | 제주○○○ | 30,000 |
| 2 | 사무실 3층 임차보증금 | 2021. 1. 1.~2021. 12. 31. | 제주○○○ | 30,000 |
| 3 | 사택 임차보증금 | 2021. 3. 30.~2022. 3. 29. | ○○○○ | 250,000 |

주: 2022년 12월 감사일 현재까지 임차보증금은 1년 단위로 갱신 체결하고 있으나 결산일 기준으로 다음 연도 계약 갱신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원칙적으로 보고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여야 함

자료: 제주에너지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결산서(재무제표) 상의 임차보증금 유동성 분류가 잘못되어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일반보상금 과목 집행 내역을 연구개발비 집행 내역으로 변경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2019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행정안전부) IV-1-1-나. 계정과목 분류 체계에 따르면 계정과목은 「201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결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1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행정안전부) VI-5. 지출예산과목 성질별 분류 및 과목해소에 따르면 지방공사의 규정 등에 따라 민간인의 보상에 따른 시상금품 등은 일반보상금 과목으로, 연구개발비 과목은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시험연구비 등의 목적으로 각각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지출예산 과목해소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서 작성 시 계정과목을 적정하게 분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기관에서는 2019. 11. 29. 주민참여사업 아이디어공모전에서 수상한  등 6명에게 포상금 계 1,300천 원을 지급하면서 관련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일반보상금 예산과목에서 집행하였 으면서도 결산서 작성 시에는 연구개발비 예산과목으로 집행을 한 것으로 잘못 작성하는 등 [표 3]과 같이 2019년도부터 2021년도 매년 결산서를 작성하면서 재무제표 상에 일반보상금 예산과목에서 집행한 내역을 연구개발비 예산과목에서 집행한 것으로 잘못 작성하였다.

[표 3] 2019~2021년도 결산서 작성 시 일반보상금을 연구개발비로 잘못 작성한 명세

(단위: 천 원)

| 회계연도 | 집행 예산과목 | 집행액 | 집행 사유 | 결산서상 | |
|-------|---------|-------|---------------------------------|-------|----------|
| | | | | 적정 과목 | 실제 작성 과목 |
| 2019년 | 일반보상금 | 3,200 | 주민참여사업 아이디어공모전 포상금 지급 등 | 일반보상금 | 연구개발비 |
| 2020년 | 일반보상금 | 3,850 | SNS 홍보 서포터즈 게시물 제작에 따른 포상금 지급 등 | 일반보상금 | 연구개발비 |
| 2021년 | 일반보상금 | 1,086 | 도민참여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 및 포상금 지급 등 | 일반보상금 | 연구개발비 |

자료: 제주에너지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결산서(재무제표) 상에 연구개발비 관련 내용이 잘못 작성되어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2022년도 결산 시에 건설중인자산 89,584천 원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결산과정에서 계정과목을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 ① “2항”과 관련하여 향후 결산 시점에 ■■■리파워링 사업 추진을 위해 계상된 건설중인자산 89,584천 원을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고,(시정)
- ② “3항” 및 “4항”과 관련하여 앞으로 결산서(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등에 맞지 않게 보고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유동자산이 아닌 비유동자산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실제 집행한 예산이 당초 반영된 예산과목과 다른 과목에서 집행된 것으로 잘못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9】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금전 출납 등 회계 처리 관련 내부통제 장치 미흡

관계기관(부서) 제주에너지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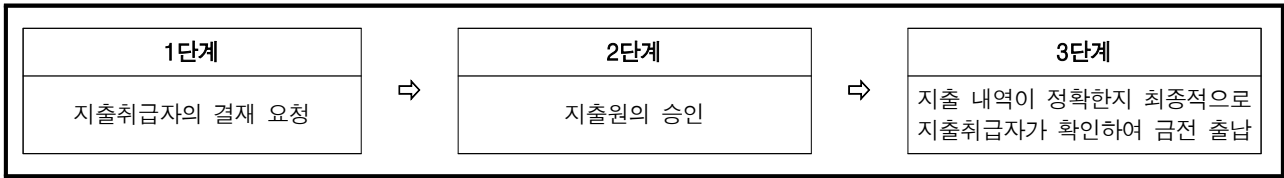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판매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표]와 같이 주거래은행인 ○○○은행의 전산시스템에 연결된 ▲▲▲시스템³⁹⁾을 이용하여 ① 지출취급자의 결재 요청, ② 지출원의 승인, ③ 지출취급자가 지출 내역이 정확한지 최종 확인하는 등 3단계의 절차를 거쳐 금전 출납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39) 위 기관에서 금전 출납을 위하여 위 기관 회계시스템과 ○○은행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한 일종의 인터넷뱅킹 처리시스템임

[도표] 제주에너지공사의 ▲▲▲ 시스템을 이용한 금전 출납 업무 처리 절차



자료: 제주에너지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제주에너지공사 회계규정」 제6조에 따르면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지출담당부서의 장을 지출원⁴⁰⁾으로, 지출담당부서의 직원 중 사장이 임명하는 자를 지출취급자⁴¹⁾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은행에서 2018. 7. 6. 마련한 「▲▲▲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8-1. 사용자 관리에 따르면 ▲▲▲ 시스템의 관리자 계정에서 ▲▲▲ 시스템에 접속하는 모든 계정에 대하여 지출원, 지출취급자 등의 금전 출납 권한 부여, ○○은행 계좌 조회 권한 부여 등 총괄적인 권한 부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최근 중견기업, 대기업, 공직사회 등을 가리지 않고 거액의 횡령 사건⁴²⁾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금전(자금) 취급에 따른 내부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회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금전 출납 업무를 처리하는 지출원과 지출취급자가 아닌 제3자를 별도 지

40) 2022년 12월 감사일 현재 ▲▲▲▲▲ ▲▲▲로 지정되어 있음

41) 2022년 12월 감사일 현재 ▲▲▲▲▲ ▼▼▼으로 지정되어 있음

42) 2022년 1월 ■■■의 2,215억 원 횡령 사건, 2022년 2월 ■■■의 115억 원 횡령 사건, 2022년 4월 ■■■의 614억 원 횡령 사건 등이 발생함

정하여 관리자 계정을 관리하도록 하고, 관리자 계정에는 지출원과 지출취급자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지출원과 지출취급자로 지정된 자에 한해서만 금전 출납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 시스템의 관리자 계정에 대한 내부통제 미흡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22. 12. 14.~12. 20.) 중 위 기관의 ▲▲▲시스템 계정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 기관에서는 ▲▲▲시스템에 접속하는 모든 계정에 대하여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관리자 계정을 지출원과 지출취급자가 아닌 제3자를 별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지 아니한 채 2022년 12월 감사일 현재까지 지출담당부서인 ▲▲▲▲▲ 소속의 지출취급자로 지정한 담당자에게 관리⁴³⁾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관리자 계정의 목적은 금전 출납이 아니라 ▲▲▲ 시스템에 접속하는 계정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관리자 계정이 지출원과 지출취급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위 기관에서는 ▲▲▲ 시스템에서 관리자 계정이 금전 출납 과정에서 지출원과 지출취급자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⁴⁴⁾에 대하여 2022년 12월 감사일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두고 있다.

그 결과 금전 출납 권한을 부여하는 ▲▲▲시스템의 관리자 계정에 대한 내부통

43) 지출취급자인 ▼▼▼은 관리자 계정 이외에 지출취급자 계정도 따로 가지고 있어, 금전 출납 처리 시에는 지출취급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출납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44) ▲▲▲시스템을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주)▲▲의 □□□□을 통하여 유선으로 확인(2023. 2. 22.)한 결과, 관리자 계정이 등록자, 승인자 등으로 설정되어 금전 출납 과정에 활용되는 상황을 시스템적으로 차단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제 미흡으로 회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나. 전력판매 대금 등 수입 계좌 금전 출납에 따른 내부통제 미흡

위 기관에서는 전력판매대금 등을 수입으로 처리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4개의 수입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다.

[표 1] 제주에너지공사 수입 계좌 개설 운용 명세

| 연번 | 계좌번호 | 은행 | 개설일자 | 사용 용도 |
|----|------|------|--------------|----------------------------|
| 1 | - | △△은행 | 2013. 5. 3. | (주)▲▲▲(주) 관련 REC 발급 수수료 계좌 |
| 2 | - | △△은행 | 2017. 7. 5. | (주)▲▲▲(주) 관련 REC 판매 대금 계좌 |
| 3 | - | △△은행 | 2018. 1. 16. | 전력판매대금 수입계좌 |
| 4 | - | △△은행 | 2018. 1. 16. | REC 판매대금 수입계좌 |

주: (주)▲▲▲의 경우 ESS 설치 시 사업비를 부담함에 따라 실제 수익 발생 시에는 협약에 의해 제주에너지공사와 (주)▲▲가 46:54로 수익을 나누도록 되어 있음

자료: 제주에너지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업무분장 상 지출 관련 업무는 ▲▲▲▲▲에서 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금전 출납 업무를 “가항”의 내용과 같이 위 기관 ▲▲▲▲▲ 소속 직원 2명을 지출원과 지출취급자로 지정하여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4개의 수입 계좌도 ▲▲▲▲▲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에서 별도 관리하도록 하면서 [표 2]와 같이 지출원의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금전 출납을 하게 하는 등 별다른 내부통제장치 없이 2022년 12월 감사일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다.

[표 2] ▲▲▲▲▲ 금전 출납 업무 처리 불합리 명세

| 연번 | 금전 출납 목적 | 금전 출납 방식 | 금전 출납 업무 처리 절차 |
|----|--|--|---|
| 1 | ▲▲▲▲▲에서 관리하는 수입 계좌에서 위 기관 지출전용 계좌 ¹⁾ 로 이체 | ▲▲▲▲▲의 ㉠㉠㉠이 ▲▲은행 인터넷뱅킹 ²⁾ 으로 이체 | ① '유휴자금 예금전환' 문서를 ▲▲▲▲▲장의 전결로 결재 ② 인터넷뱅킹으로 이체 |
| 2 | 여유자금 예치 | ▲▲▲▲▲의 ㉠㉠㉠이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예치 | ① '정기예금 예치' 문서를 ㉠㉠㉠장의 전결로 결재 ② 은행을 방문하여 예치 |

주: 1. ㉠㉠은행 통장임

2. OTP인증과 공인인증서 인증 방식을 통해 지출원 등의 승인 절차 없이 금전 출납 업무를 하고 있고, ▲▲은행 인터넷뱅킹의 1회와 1일 한도는 20억 원임

자료: 제주에너지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더욱이 위 기관에서는 위 4개의 수입 계좌 관리를 ▲▲▲▲▲의 ㉠㉠㉠에게 하도록 하면서 지출취급자나 지출원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채 금전 출납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수입 계좌의 금전 출납 업무 처리에 따른 내부통제 미흡으로 회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에서 계좌이체를 한 후 ▲▲▲▲▲의 지출원이 이체내역을 확인하여 회계시스템에 전표를 입력하는 등 지출원과의 상호검증을 통해 입출금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앞으로 ▲▲▲관리자 계정을 지출원 외 제3자(감사부서장 등)가 관리하고 수입 계좌의 금전 출납은 지출원의 승인절차를 통해 처리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회계사고 방지를 위하여 ① ▲▲▲시스템의 관리자 계정을 지출부서인 ▲▲▲▲▲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되 관리자 계정에 금전출납을 할 수 있는 지출원과 지출취급자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고, ② ▲▲▲▲▲에서 현재 금전출납하고 있는 방식인 △△은행 인터넷뱅킹을 폐지하도록 하며, ③ ▲▲▲▲▲에서 관리하고 있는 4개의 수입 계좌에 대한 관리는 회계직을 지정하여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금전 출납 업무 처리에 따른 합리적인 내부통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